

# 국힘 TF “尹 2·3월 퇴진론 거부”...탄핵 이탈표 많아지나

### 대통령실 부정적 기류에 난관 일각 ‘대안 여지 없다’ 회의론도 차기 원내대표 따라 ‘당론’ 달라질 듯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인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을 놓고 대통령실 설득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며 난관에 봉착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중혁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는 하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입장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질서 있는 퇴진’이나 로드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나머지(선택지)는 의미 없는 것 아니냐”며 당의 추가적인 대안 논의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에서는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며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 표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안철수·배정환·장동혁·김상욱·김예지·김재섭·박정훈·우재준·진중ום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의원 등 5명이다. 박정훈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자진 사퇴보다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알려지면서 추가 이탈표가 이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이 여전히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퇴진 로드맵을 마련한 당 ‘정국 안정화 TF’의 이양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며 한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TF 관계자는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라가 분열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계엄 사태로 나라에 이런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및 대선 시점을 제시해줘서 혼란을 덜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에 대해선 12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목에 기브스 했나”...내란 사태 사고 안한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비상계엄 선포날 ‘날림 국무회의’

### 회의 장소 국무회의실 아닌 대접견실...회의시간 ‘단 5분’

### 간신히 과반 채운 11명 참석 제대로 된 회의록조차 없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서 회신받아 11일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국무회의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채 ‘날림’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대통령실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던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접견실은 통상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만날 때 이용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 중대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장소조차 구색을 갖추지 못했을 정도로 회의가 급박하게 준비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의는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당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났다. 계엄 선포라는 위중한 안건 심의를 단 5분 만에 마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회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인 등 21명이 참석한다.

연합뉴스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5월 12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열린 국무회의의 144건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국무위원(장관급)이 전원 참석한 경우가 각 부처 차관 등 대리출석을 포함해 75.7%(109건)에 달했다.

1명이 불참한 비율은 18.1%, 2명이 불참한 비율은 1.4%였다. 고작 11명이 참석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와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예정에 없던 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해 급히 열리면서 국무위원 참석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의 절차는 초고속으로 진행돼 단 5분 만에 마무리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불과 1분 뒤인 오후 10시 23분께 생방송을 통해 긴급 담화를 시작했고, 6분간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안부에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를 회의록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국무위원이 찬성했고 누가 반대를 표했는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등이 여전히 미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둘러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정작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함께 보내온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 시간도 단 2분에 그친 것으로 나온다.

대통령실은 해제 관련 국무회의의 발언요지로

#### 대통령 권위·사고시 권한대행 순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시상·파면·판결·사임 등으로 자격 상실(60일 내대선) 재직중 질병·요양·권한정지 등으로 직무수행불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b>한덕수</b> 국무총리 <b>고발</b>	2. <b>최상목</b>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b>이주호</b>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 <b>유상임</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b>조태열</b> 외교부 장관
6. <b>김영호</b> 통일부 장관	7. <b>박성재</b> 법무부 장관	8. <b>사퇴</b> 김용현 국방부 장관 <b>구속</b>	9. <b>사퇴</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b>고발</b>	10. <b>강정애</b> 국가보훈부 장관

연립뉴스 \*12월 11일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사전:정부24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합뉴스

## 한덕수 총리, 12·3 비상계엄 사태 거듭 사과

### “국무위원 전원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를 묻자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

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출석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메시지를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